

문화올림픽 예산 100억 전액 빠졌다

내년 정부 예산안 386조7천억 확정

도 목표 초과 6조2,700억 확보 불구 올림픽 주요 사업비 미반영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산도 제외... 동서고속철도 등 120억 편성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도가 요청한 국비 10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아예 반영조차 안 됐다. 올림픽과 관련된 주요 사업비가 빠지거나 축소돼 성공 개최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도는 내년도 목표였던 국비 6조2,000억원을 초과한 6조2,700억원을 확보했다. SOC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올해 수준 확보를 전제로 금년 대비 1,9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문화올림픽 예산 100억원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지원 예산 102억원 전액이 빠졌다. 이들 사업은 도가 외국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콘텐츠 육성의 핵심사업이다. 문화올림픽 예산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50억원을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에따라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평창동계올림픽을 명실공히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도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만 2018년 동계올림픽 이전 운행이 가능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빠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장 신설과 진입도로 건설 등 올림픽 시설 관련 예산은 도 요구액 4,262억보다 감액된 3,391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철도와 도로 등 SOC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890억원 증액된 3조2,513억원이 반영됐다. 원주~강릉 철도(1조1,727억원), 포항~삼척 철도(6,169억원), 원주~제천 전철(1,918억원) 사업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철도 건설 예산은 수시사업비로 120억원이 편성돼 예타단 통과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올림픽과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산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올림픽 시설 예산은 경기장별 완공 시기를 고려한 예산 배정으로 내년도 테스트이벤트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성현·홍현표기자

■ 2016년도 국비 주요 사업 반영 현황

사 업	내 용	예 산
SOC 교통망	원주~강릉 철도	11,727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6,169억원
	중앙선(원주~제천) 전철	1,918억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3,285억원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1,193억원
	제2 영동고속도로	2,021억원
	국도 5호선	8억원
	국도 6호선	1,379억원
	국도 7호선	127억원
	국도 31호선	910억원
	국도 35호선	120억원
	국도 38호선	604억원
	국도 42호선	394억원
국도 59호선	363억원	
국지도	242억원	
동계올림픽	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건설	3,391억원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확충	135억원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	150억원
국가·지방 향만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20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	185억원
	속초항 여객선 부두 및 여객 터미널 설치	239억원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	34억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20억원
	삼척항 공촌항 침식·좌적 저감시설	58억원
폐광지역 및 관광개발	고성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	43억원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139억원
주요 현안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115억원
	양양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	17억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15억원
	중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52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62억원
	고성 국회의원정년연수원 건립	134억원
생태하천복원	227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51억원	

약발 다한 재정 조기집행

건설업계 연말 경영난 우려

올해 4분기 도내 건설업계 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10~12월 발주물량은 86건 4,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발주량 중 발주 건수는 전체 3,436건의 2.5%, 발주금액은 전체 4조395억원의 12.4% 수준이다.

이처럼 연말 건설공사 발주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체의 지분이 극히 적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80% 발주

4분기 공공공사 물량 4,999억 그쳐

올림픽·재해 관련사업도 크게 줄어

있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들의 발주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실제 올해 1분기에 2,504건 2조6,250억원, 2분기에 713건 6,393억원 등으로 상반기에만 80% 이상의 건설공사가 발주됐다. 또 올해는 태풍이나 장마의 피해도 없어 유지·보수공사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200억원이 넘는

공사가 없어 심각한 수주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지주택공사 주택 관련 사업이나 정기적으로 연말에 발주되는 도로공사의 연간 유지·보수공사 등은 모두 사업비가 100억원대 미만으로 지역제한으로 풀릴 예정이지만 발주량이 작아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상반기에만 몰려 있어 하반기에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가 많다”며 “건설업체들이 꾸준한 공사를 수주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윤기자

내년 예산 386조원

올해보다 3% 11조원 증가
나라빚 사상 첫 40% 돌파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평창올림픽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강원본부,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에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박용만)가 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한 김지영 도 동계올림픽본부장 초청간담회에서는 도내 관련 업체들이 올림픽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김철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도회장은 “도내 업체들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수주공사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허용되는 부분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컬링센터라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봉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알펜시아 공사에 도내 업체 5개가 참여했지만 4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며 “동계올림픽 공사에 지역 업체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윤홍식 도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사장은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시 콘크리트 이차제품은 발주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 납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급적 특수제품이 아닌 KS 제품이나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발주가 이루어져 도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영 본부장은 “다자간 계약 입찰을 통해 5개 업체는 도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올림픽 경기장 시설 등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봄 조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프로필

백종수 원주부시장



백종수(58) 원주부시장은 “화훼특화단지, 기업도시 등 현안을 잘 챙기고 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 원주 출신. 대성고, 상지대 행정학과를 졸업. 1976년에 공직에 입문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환경녹지국장, 경제문화국장, 도 기업지원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신화선씨와 2남.

지승태 고성부군수



지승태(56) 고성부군수는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고성 실현을 위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 동해 출신. 북평고, 춘천전문대를 졸업. 1984년에 공직에 입문해 도회계과장, 레고랜드추진단장, 경리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안인숙씨와 1남1녀.

도 내년 국비 6조2700억

정부, 예산안 386조7000억 확정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 (11조3000억원)가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강원도 예산은 6조27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6조715억원)보다 3.3% (198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SOC분야는 전년대비 890억원이 늘어난 3조2513억원이다.

철도의 경우 강원선(원주~강릉) 1조1727억원을 비롯해 △동해중부선(포항~삼척) 6169억원 △중양선(원주~제천) 전철 1918억원 등이,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3285억원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1193억원 △제2 영동고속도로 2021억원이 반영됐다.

강원 올보다 3.3% 증가 SOC 분야 3조2513억 투입

춘천~속초·여주~원주철도 예타진행 이유 반영 안돼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비는 △경기장 및 진입도로 3391억원 △급수체계 확충 135억원 △특구 관광개발 150억원 △특구 도시경관 20억원 등이다.

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51억원 △생태하천복원 227억원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139억원 △고성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134억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115억원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62억원 △양양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 17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가·지방항만 관련 예산도 676억원

이 반영됐다. 속초항 여객선 부두 및 여객 터미널 설치 239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 185억원 등이다.

그러나 춘천~속초와 여주~원주 철도 관련 국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이 사업들은 현재 국토교통부 수시배정 예산에 포함됐으며, 예타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기본계획 수립비로 책정될 전망이다. 또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에 요구한 예산 100억원과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 예산 31억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색 케이블카 관련 국비 102억원은 기재부의 예산 심의가 끝난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미반영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별로 논리적 근거를 보완한 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문화올림픽 예산 0원... 강원현안 '발목'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 문화올림픽 통해 날아가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확보에 줄줄이 실패하면서 올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는 내년도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해 정부에 내년 사업비로 총 4262억원을 신청했다. 분야별로 경기장 건설 2158억원, 기존경기장 개보수 307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947억원, 추가진입도로 700억원, 개폐회식장 건설 150억원 등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장 건설 437억원, 기존경기장 개보수 50억원, 진입도로 건설 184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강원도 신청액보다 671억원이 줄어들었다.

내년 테스트 이벤트

일부 종목 개최 불투명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 전액 미반영

주요현안 예산 대부분

심의과정 거치며 삭감

올림픽 예산이 문체부에서 상당액이 감액된채 기재부로 넘어가자 도는 그동안 테스트이벤트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감액된 671억원을 전액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기재부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 경기장 및

진입도로 사업비로 최종 3391억 원만 반영했다.

예산 삭감이 경기장 건설 예산이 집중되면서 내년도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정선알파인 경기장과 평창스노보드 경기장은 내년 2월,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에서는 12월에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정선알파인경기장은 27.8%,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은 10.5%, 강릉아이스아레나는 2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올림픽 예산도 전액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는 내년부터 3년동안 4개분야, 72개 세부사업에 총 5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정부에 100억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끝내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 삭감이 경기장 건설 예산이 집중되면서 내년도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정선알파인 경기장과 평창스노보드 경기장은 내년 2월,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에서는 12월에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정선알파인경기장은 27.8%,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은 10.5%, 강릉아이스아레나는 2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올림픽 예산도 전액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는 내년부터 3년동안 4개분야, 72개 세부사업에 총 5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정부에 100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150억원만 반영했다.

■ 동서고속도·오색삭도 차질

강원 북부지역 최대 현안인 동서고속도로의 내년 완공이 사실 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내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사업비로 1900억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절반 수준인 1110억원만 반영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동서고속도로 예산은 32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예산이 증액됐지만 동서고속도로 완공은 2017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동서고속도로는 당초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77%의 공정률로 완공은 2017년 6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 2016년도 주요 사업 국비 반영 현황

사업명	도 요청액	부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원주-강릉 철도	8000억원	9350억원	8807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5000억원	1800억원	5669억원
중앙선(원주-제천)	2500억원	760억원	1918억원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1900억원	2775억원	3285억원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1006억원	1183억원	1193억원
제2영동고속도로	1940억원	2142억원	2021억원
레고랜드진입교량	115억원	115억원	115억원
고성국회의정연수원	112억원	134억원	134억원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4262억원	3551억원	3391억원
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136억원	136억원	136억원
올림픽특구 관광사업	246억원	150억원	150억원
문화올림픽	100억원	0	0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43억원	43억원	20억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590억원	206억원	185억원

있다. 세번째 도전 끝에 사업을 확정 지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은 전액 미반영됐다. 도는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102억원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백은민 105in@kado.net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9일 낮 12시 평창군 한 음식점에서 '지역회원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

• 프로필 •

이 만 희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이만희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교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도 복지정책과장·투자기반조성과장·미래사업개발과장·체육진흥과장, 원주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원주출신으로 원

백오인 106in@kado.net

백 중 수 원주부시장

백중수 (58) 원주부시장은 "고향인 원주시는 물론 강원도 발전을 위해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성고와 상지대를 졸업했다. 원주시 경제문화국장·환경녹지국장·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 기업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백오인

백 부시장은 원주출신으로

지 승 태 고성부군수

지승태 (56) 고성부군수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고성군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도와 연계해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로 북평고와 춘천전문대를 졸업했으며, 강원 FC전략사업부장, 도 경리담당·과학기술담당·레고랜드 추진담당·회계과장을 역임했다.

지 부군수는 동해 출신으로

백오인

내년 예산안 386조7000억 편성... 3% 증가

SOC 23.3兆... 4年來 최저

올 본예산보다 6% 깎여
‘경제 활성화’ 기조 역할
일자리·문화 크게 늘어

내년도 정부의 지출 예산안이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 3.0%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규모는 23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23조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SOC 예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일자리 기회 확대와 문화융성 등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8일 서울·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3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여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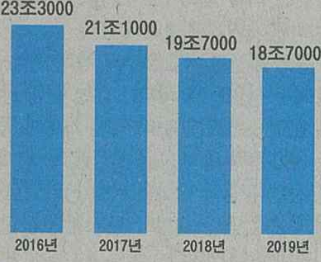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SOC 23조3000억원(올해 대비 6.0% 감소) △공공질서·안전 17조5000억원(3.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조1000억원(-2.0%) △보건·복지·노동 122조9000억원(6.2%) △연구개발(R&D) 18조9000억원(0.2%) △환경 6조8000억원(0.4%) △문화·체육·관광 6조6000억원(7.5%) 등이다.

올해 부진한 경기의 반전카드로 제시되면서 전격 확대됐던 SOC 예산은 다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OC 예산은 경기 회복이라는 임무를 띠고 올해 본예산 기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에 비해 5%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 전망 (단위: 억원)



이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1조3000억원 규모의 SOC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올해 SOC 예산은 26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증가세가 다시 꺾이게 됐다.

정부는 SOC 예산을 2017년 21조1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18조7000억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6.8%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OC 예산과 함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원도 축소됐다.

내년 예산안의 무게를 경기 활성화에 둔다면서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을 동반 삭감해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일자리 예산과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12.8%, 7.5% 확대 편성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정총량 중 총수입은 올해(382조4000억원)보다 2.4% 증가한 39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고 내년 재정관리수지는 37조원 적자 편성됐다.

재정관리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이후 9년째 적자 편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 수준으로 올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박경남기자 knp@

건협 강원도회, 오늘 회원사간담회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재하는 9일 낮 12시 강원 지역 회원 고, 애로사항들을 수렴한다.

SOC 이어 산업·중소·에너지도 줄어

해외자원개발 1202억원으로 올해보다 67% ↓
에너지 신산업·산업단지 지원 예산은 소폭 증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 부문을 통틀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SOC(사회기반시설)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단 2개에 불과하다.

이들 분야는 경제부문 예산의 핵심으로 경기 회복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해도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SOC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마저 축소되면서 과연 경기가 살아날지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16조1000억원으로 올해(16조4216억원)보다 2.0% 줄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올해 3588억원에서 내년 1202억원으로 무려 66.5% 삭감됐다.

성공불용자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예산이 크게 깎인 탓에 내년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은 3조5134억원으로 올해(3조9733억원) 대비 13.1% 축소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 활력을 높인다면서 정작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의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에너지 신산업과 산업단지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게 위안거리다.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경제 살리기 주요내용

신성장동력 창출

- 에너지신산업 창출 969억원
- 유망 미래 먹거리 사업 지원 1.1조→1.3조원
- 기초연구 확대 1.5조→1.6조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3,700억원
-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지원 385억→425억원
- 산업입주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개선 펀드 조성 확대 270억→600억원

37%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지원하는 데 신규로 314억원을 반영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산단에 155억원을 들여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환경개선펀드를 종전 270억원에서 6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산단 환경조성에도 올해(375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90억원을 투자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단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SOC, 해운·항만 빼고 전분야 삭감... '산단' 30% 삭감

도로분야 8조3720억 편성
계속사업·교통안전에 초점
물류·지역·도시분야도
전체 SOC 삭감을 웃돌아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해운·항만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삭감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삭감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단지. 정부는 내년 산단 분야에 올해(8903억원)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6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재원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건설과 노후 공간 재정비, 도시첨단 산단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내년에 신규로 반영된 산단 예산 중 예산 관공기업지원하브 조성이 164억원으로 눈에 띈다.

도로와 물류·지역·도시 분야의 예산 삭감률도 전체 SOC 예산 삭감률(-6.0%)을 웃돈다.

내년 도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8조3720억원으로 올해(9조345억원)보다 7.8%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계속사업의 완공과 교통안전 강화에 도로 투자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계속사업은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지역공약 등 기간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실제 국도 완공사업의 경우 올해 29건, 3279억원 규모에서 내년 61건, 9656억원 규모로 3배 정도 증액됐다.

정부는 고위험 교량 터널 정비,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기로 하고 도로 안전투자 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물류·지역 및 도시 예산은 3조2339억원으로 올해(3조4895억원) 대비 7.3% 축소됐다.

쇠퇴한 도심에 재생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올해(420억원)보다 14.3% 증가한 480억원이 편성됐고 새만금과 세종시 등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책정됐다.

수자원과 철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삭감폭이 크지 않지만 감액 대상에선 예외가 아니다.

내년 수자원 예산은 2조1749억원으로 올해(2조2731억원) 대비 4.3% 줄었다.공급용수도, 광역상수도 등 19곳의 용수공급 및 개발에 올해(691억원)보다 61.5% 증가한 1116억원을 지원하고 가뭄·장마에 대비하기 위한 소규모 댐 3곳 건설에 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철도는 국가 간선철도망 적기 구축과 안전투자 확대가 큰 줄기다. 이천~문경과 하남선 복선전철에 올해(각 800억원)에 비해 각각 39.0%, 56.3% 확대된 1112억원, 1250억원을 편성하고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올해(4149억원) 8.2% 늘어난 4488억원을 지원해 철도사고 예방과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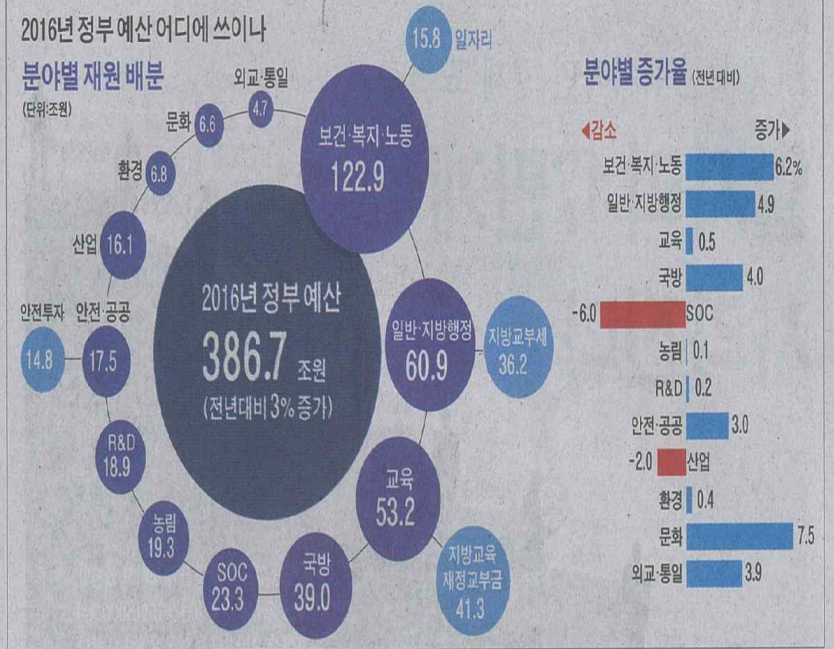
반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속에서도 해운·항만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 내년 해운·항만 예산은 1조7183억원으로 올해(1조6643억원)보다 3.2%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된 항만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에 올해(1374억원)보다 34.2% 늘어난 1844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363억원에 그쳤던 평택·당진항 예산도 521억원으로 40% 넘게 확대했다.

또 노후·유류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양·인천 등 3개 항만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외에도 항공 SOC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 공항 건설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흑산도 공항도 설계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배정했다.

박경남기자 knp@



SOC 예산 구조조정 궤도로 복귀

2019년까지 연평균 6.8% 감소... 18.7兆 전망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내년부터 구조조정 궤도로 복귀한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과 함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총량) 등을 감안해 SOC 투자 규모를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 주요 20개국(G20)의 국도면적당 도로·철도 연장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3위, 철도는 6위에 올라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당초 SOC 예산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탓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도 SOC의 경기 부양 효과를 인정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을 SOC에 투입하기로 한 데다 정치권에서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면서 SOC 예산이 2년 연속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SOC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년 SOC 예산은 추경 여파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SOC를 올해 추경 편성에 따라 앞당겨 진행하면서 내년 SOC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SOC 추정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의 진도를 끌어올리는 것들"이라며 "올해 추경을 내년 예산에 포함하면 SOC 예산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SOC 예산 편성의 노선이 구조조정으로 선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은 하향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 규모는 내년 23조3000억원 을 기록한 이후 2017년 21조1000억원으로

9.4% 줄어들고서 2018년에는 19조7000억원(-6.6%)을 기록하며 7년 만에 20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잡혀 있다.

2019년 들어서는 18조7000억원으로 5.1% 추가 축소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뒤 향후 4년에 걸쳐 24.6% 줄어드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8% 감소하도록 설계됐다.

SOC 예산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재원배분 기준도 신규사업 자체와 안전 중심으로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국가기간망에 대한 투자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을 거쳐 집행되면 고속도로는 올해 4162km에서 2019년 4674km로, 철도는 올해 3944km에서 2019년 4398km로 각각 4.1%, 1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남기자

【 2015.09.09(수) 건설경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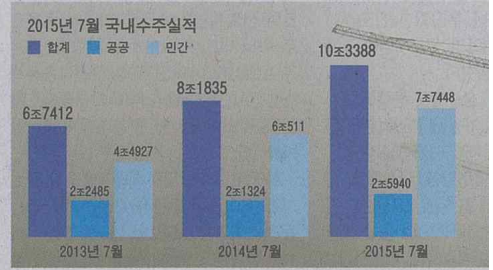
公共공사 수주 회복세

건협 집계, 7월 2조5940억
지난해보다 21.6% 증가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건설업계의 민간공사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수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015년 7월 건설업계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10조3388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 8조1835억원보다 26.3%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민간부문 수주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공공부문 수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5940억원으로 작년 7월 2조1324억원보다 21.6% 증가했다. 6월보다는 감소했지만, 7월까지 수주 누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에서 기계설치, 항만·공항, 상하수도 부문이 감소했지만, 토지 조성을 중심으로 작년 대비 19.6% 늘었다. 공공건축은 사무실·관공서 등 비주거

부문이 줄었지만, 주거 부문에서 신규 주택 수주가 증가하면서 24.9%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는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수주액은 7조7448억원으로 작년 7월 6조5119억원보다 28.0% 늘었다. 7월 까지 누계 실적은 작년 34조977억원에서 올해는 58조2076억원으로 71.1% 증가했다. 민간건축 부문별로는 비주거 부문이 5.0% 줄었지만, 주거 부문이 69.7% 늘면서 전체 민간 수주액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재건축 수주가 작년 같은 달보다 33.2% 증가한 7조3598억원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속된 주택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수주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거래와 건축인허가 실적 등 관련 지표 역시 증가세를 지속했고 6월에 늘었던 미분양 주택이 7월 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들어 민간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민간 부문이 건설경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공공 부문은 활발한 호조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SOC 추경예산의 본격적인 집행 등으로 공공 부문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줄어든다

조달청, 시설자재 가격 상반기보다 0.76% 하향조정

올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76% 하향 조정된다. 주요 원자재가 하락의 영향이라고는 하나 수익성 악화로 신음하는 건설업계의 적정 실행확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김삼규)은 8일 시설자재 가격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발주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8667개 품목 및 시장시공가격 892개 품목 등 모두 9559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확정,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학계, 건설 관련 협회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본 위원회와 4개 분과위(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업계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 2회 공공시설 공사비에 적용할 품목별 가격을 심의, 확정한다. 이번 심의 결과를 보면, 전체 9559개 품목 중 상반기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은 단열재와 벽지류, 소방자재류 등 216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열강류와 강철류 등 1565개 품목은 공사비에 적용할 가격이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나머지 7778개 품목은 상반기와 대동소이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시설공사에 적용할 전체 품목별 시설자재가격은 상반기보다 평균 0.76% 하락했다. 윤헌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에 대해 “이번에 확정된 시설자재가격은 일부 원자재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 상황과 시장 노임단가 등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 소폭 하락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원자재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사업물량이 줄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어려운 건설현장 및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하락폭을 소폭으로 조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는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누적된 시공적자와 더불어 적정 실행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재가격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현실단가를 반영할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더딘 가운데, 총사비비협약의 계약시사를 거치지 않고 삭감되는 공사비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제도 및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디고, 실제 현장이 체결할 수 있는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공사비 산정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에도 확정된 시설자재가격은 공공기관과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가격정보)에 공개하고, 인터넷 가격검증(Feed-Back)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홍승권기자

아하! 그렇구나

개인에게 입찰을 대행시킨 건설업자의 책임여부

1. 사건개요
건설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입찰을 운영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A와 전자입찰을 대행한 후 낙찰되면 수주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A에게 각 공인인증서를 주어 A로 하여금 조달청이 시행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이 건설업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건설업자들이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입찰을 대행시키고 낙찰을 받으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입찰 결과에 따라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를 들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호의 “다른 건설업자”라는 범주이나 이와 병렬관계에 있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할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란 할 것이고,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는 위 규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이상 건설업자들이 A로 하여금 각기 자신들 회사와 관련된 견적만 제출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로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A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건설업자들로부터 그 전자적 정보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러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그들로부터 발급서류를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발급받았으며, 입찰할 공사 및 입찰가격 등 일체를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은 그와 같은 입찰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A는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과 상의하거나 상의 없이 이를 갱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A가 건설업자들의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투찰한 것은 단순히 건설업자들의 전자입찰을 대행하였다기 보다는 A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A로 하여금 전혀 간섭받지 아니한 채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건설업자들 명의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인인증서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들이 그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A에게 대여한 다음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갱신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이를 다시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4963 판결).

결국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입찰을 대행하게 하고 낙찰된 경우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전자서명법에는 위반되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건설업자들은 위와같이 입찰을 대행시킬 경우 전자서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건설 법률상담 자원위원·법무법인 동인)

